

UR/WTO 체제하의 교육개방

김 대 환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1. 머리말

오늘날 세계경제는 범지구화에 따른 급속한 구조변화를 시현하고 있다. 이는 비단 자본주의 발전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의 전개에서 '글로벌 자본주의'의 새 장을 여는 것으로 묘사될 정도로 새로운 현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전후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기본축을 이루었던 IMF-GATT체제의 동요 이후 혼미를 거듭했던 세계경제질서의 대안, 그것도 이전보다 광범하고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는 새로운 경제질서로까지 운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 않고 국가별·부문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대세이자 현실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되어 있어, 글로벌 자본주의의 앞으로의 전개는 WTO체제로

그 가닥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먼저 세계경제의 범지구화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경제적 요인을 살펴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WTO체제로서의 글로벌 자본주의의 성격을 규정한다. 그리고 바로 이 맥락에서 교육시장개방의 문제를 교육서비스, 특히 대학(원)개방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개방의 영역과 원칙, 그리고 개방의 영향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대학개방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원칙론적인 수준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범지구화'의 배경과 요인

세계경제의 공간적 확대와 시장논리의 강화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그리고 경제활동에서 국가와 시장에 대한 강조가 시기마다 다르게 이루어져 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범지구화 현상도 크게 보아 이러한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그 공간적 확대의 범위가 이전의 어느 시기보다도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시장의 논리가 유례없이 강조되어 국가의 위상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와 세계경제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국가, 시장 및 세계시장과 관련하여 시기별로 개관한다. 특히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범지구화의 요인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 역사적 배경

중상주의 시대는 국가가 전면에서 이른바 부국강병을 추구했던 시기로, 이 때는 시장논리에 앞서 국가의 주도성이 강조되고 세계경제의 개념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규정성이 희박했다고 할 수 있다.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시장의 논리에 근거한 부르주아 자유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최소화가 내세워졌지만 국민경제의 발전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었다. 이를 기초로 19세기 중반부터는 점차 국제경제체계가 형성되어 갔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의 외연적 확대와 더불어 세계경제의 중요성과 시장의 기능이 증대되고 강화되었다.

그러나 1870년대 이후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세계경제(해외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한편 국가의 비중도 다시 증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 귀결로서의 제1차 세계대전은 그동안 구축되었던 국제경제체계를 파괴하였다. 이어 전간기(戰間期), 즉 양차 세계대전 사이 기간의 초기에는 시장기능과 국제경제체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1930년대에는 공황도 겹쳐 자국의 국민경제의 보호를 위한 '경제적 민족주의'가 창궐하고 국가가 시장의 조정자로 부상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된 역사과정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협의를 통해 성립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험을 교훈삼아 자유로운 세계시장과 국가의 대내적 책임 사이에 균형을 취하고자 한 노력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내적 복지 및 시장조정과 더불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에 부응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이 IMF-GATT체제가 1960년대 말부터 동요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국민경제가 국제기구에의 종속으로 경도되는 과정을 보이면서, 세계경제 및 시장의 논리와 아울러 국가의 역할도 여전히 중시되었다. 결국 기존의 국제경제질서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그러다 근래에는 현실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서 세계시장이 더욱 확대됨과 아울러 시장논리가 더욱 강조되는 한편 국가의 위상이 크게 도전받는 상황이 전개되어 왔다. 바로 이 연속선상에 GATT를 대체한 WTO체제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세계경제체제로서의 글로벌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시켜 나아갈 것이다. 말하자면 이 글로벌 자본주의는 1970년대 이래 기존 국제경제질서의 붕괴로 혼미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UR의 여로를 통하여 WTO체제로 귀결되는 과정을 통하여 성립되어 온 것이다. 이 과정이 급속하게 진행된 데에는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선진국—특히 현실 사회주의체제의 동요 및 붕괴 이후 선진자본주의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2) 정치경제적 요인

이제 세계경제의 범지구화 현상을 가져온 요인들을 보기로 하자. 거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였겠지만,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요인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본의 역학구조 : 전후 케인지안 경제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자본가 및 조직노동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는 조직노동자세력의 강화를 가져오는 한편 자본가들의 이윤마진을 축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본가들은 투자를 회피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의 복지지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투자저해 요인으로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압력을 가하였다. 여기에 장기적인 경기침체라는 상황논리가 가세함으로써 자본가의 투자 마인드와 시장논리가 무엇보다 중시되게 되었다. 이는 자본 파업(capital strike)을 통한 자본가의 국가와 노동 조합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본의 힘이 시장의 외연확대 및 시장논리의 강화로 이끈 중요한 요인이다.

② 생산체제의 재편 : 기존 세계경제질서의 동요 및 축적체제의 위기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를 중시하는 포디즘(Fordism) 체제가 생산의 유연성을 중시하는 포스트 포디즘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생산의 지역적 분산 및 확대가 가속화되었다. 이는 과학기술혁명에 따른 통신 및 정보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도 긴밀히 연관된 것으로,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산시설의 지역적인 광범한 분산과 동시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들 다국적기업에 대한 효율적 경영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생산체제의 재편은 생산의 지역적 범지구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이들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약화시키는 한편 유연적 생산방식을 통해 조직노동자 세력의 약화를 가져와 자본 및 시장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③ 금융자본의 역할 : 현대 자본주의에서 기업과 정부 모두 주식시장이나 조세수입보다는 금융차입에 의존함으로써 금융자본의 지위가 매우 높아지고 이 가운데서 차지하는 외채의 비중이 증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각국은 신용도 순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각국의 경

정정책은 세계적 대금융자본의 이해관계에 의해 독자적 입지가 점차 협소화되어 왔다. 금융자본은 점차 생산과 분리되어 독자적 힘을 가지고 경제전체를 관장하는 한편, 특히 컴퓨터망을 통한 신속한 국제적 이동을 통하여 시장의 지역범위는 물론 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왔다. 이러한 금융자본이 장기적 산업발전보다는 단기적 이득을 노려 국경을 자유분방하게 넘나들으로써, 이른바 '카지노 자본주의'와 함께 세계경제의 범지구화가 '황기차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④ 미국의 패권주의 : 전후 수립된 IMF-GATT 체제는 미국의 헤게모니 아래 이루어진 것이며 이 기존체제의 붕괴 역시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저하에 기인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며 특히 현실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에는 더욱 박차를 가해 왔는데, 걸프전은 그 명백한 표현임과 동시에 세계(미국)금융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지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세계경찰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 경제력과 군사력의 불균형 상태에서 미국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경제력 회복을 통해 양자를 조율시키는 것이다.

UR의 협상과정은 미국의 이러한 노력의 반영이었으며, 그것은 미국에게 만족스러운 시장논리의 무차별적 적용을 통한 시장의 전지구적 확대로 귀결되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슈퍼301조의 부활, 반독점법의 해외적용 등 독자적 힘을 행사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 지역경제블록화와 WTO체제성립이다. UR타결에 있어서는 미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했던 선진국들이 일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여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WTO체제를 성립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3. WTO 체제로서의 글로벌 자본주의

그동안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UR이 타결되고 그 결과 WTO체제가 성립됨에 따라 이제 세계경제는 새로운 질서 속에 움직이게 되었다. 물론 WTO체제는 엄밀하게 말하여 무역에 관한 것이지만 앞으로 남은 환경라운드(GR), 노동라운드(BR), 기술라운드(TR), 경쟁정책(CP) 협상 등도 다소의 진동은 있겠지만 크게 보아 WTO체제의 원칙이 원용될 것이므로, 이 WTO체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글로벌 자본주의의 질서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WTO체제의 성격은 곧 글로벌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는 교육시장개방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특히 교육서비스의 개방에 대한 대응과제를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WTO는 한마디로 시장경쟁의 논리와 자유무역의 원리에 입각하여 세계의 통상문제를 항상적으로 다루는 기구이다. 물론 이전의 GATT도 자유무역의 정신에 기초한 협의기구였음에는 틀림없지만 WTO는 보다 포괄적이며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UR이 그동안 GATT가 해결하지 못하였거나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전자에는 농산물, 회색조치, 비관세장벽, 분쟁해결 절차 등이 속하고 후자에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이 속한다. 또한 WTO는 기존의 GATT가 집행력이 전혀 없어서 실제로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 움직여 오다 미국 경제력의 약화로 표류하는 상태였는데 비해 항상적으로 논의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구이다. 특히 분쟁해결에 있어서 GATT는 항상적으로 전원합의제였지만,

WTO는 전원합의제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다수결제를 채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결정과 집행이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GATT에 비해 훨씬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구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WTO체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선진국, 이른바 G7의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관철된 것으로, 예외없는 개방과 시장논리의 무차별적 적용이 원칙을 이룬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목소리를 높여왔던 남북 문제의 해결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것은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도 정도와 부문별 차이는 있지만 매 한가지이다. 이는 1960년대까지 개발도상국에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던 국민경제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으로, 국제경제교류의 증대와 시장의 원리에 따른 상호이익의 논리만이 강조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세계경제에서의 상대적 지위의 개선을 통한 선진국과의 경제적 격차의 축소는 논리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상당한 정도의 위기를 가져다주고,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분발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선진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은 더욱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방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WTO체제하에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자본주의이다. 한편으로는 적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다.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교육시장의 개방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논의하기로 한다.

4. 교육시장의 개방과 대응방향

앞에서 언급한 대로 WTO체제에서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완전 개방하게끔 되어있다. 교육 분야에도 교육기자재만이 아니라 교육서비스 자체도 쌍무협상이나 교역대상으로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경우는 1993년의 UR 최종개방계획서 작성시까지 교육부문은 제외하였으나 아시아 국가의 교육시장개방 추세를 외면할 수 없었고, 미처 충분한 준비를 갖추기도 전에 1995년의 기술계 학원시장의 개방을 필두로 1996년까지 완전개방될 것이다. 교육서비스 부문 가운데서도 학원과 대학(원) 분야의 개방이 가장 가시적으로 또 빠르게 개방되어 나갈 전망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 개방의 영역과 개방의 원칙을 살펴본 다음, 이 가운데서도 대학(원)의 개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제를 원칙론적인 수준에서 다루기로 한다.

1) 개방의 영역과 원칙

교육시장은 크게 나누어 교육서비스, 교재 및 공구, 교육시설, 기타 교육지원 사업 등 네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 영역의 상호개방을 의미한다.

- ① 국경간 공급의 개방 : 국내에서 외국소재의 방송통신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데 대한 제한의 철폐
- ② 소비자 이동의 개방 : 국민의 외국유학에 대한 제한의 철폐
- ③ 상업적 주재의 개방 :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진출하여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데에 대한 제반 제한의 철폐

- ④ 노동력 이동의 개방 : 외국인이 국내에 입학하여 교육서비스의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데 대한 제한의 철폐

이 네 가지 영역 가운데서 특히 세번째, 즉 상업적 주재의 개방이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를 좀 더 세분하여 보면 i) 외국인이 국내에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 교육기관의 경영주가 되는 방식, ii)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교육경영자와 합작 또는 계약체결로 자국의 교수 및 직원을 파견하는 방식, iii)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교육과정, 운영방식, 교육방법 등만을 제공하고 그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대신 로얄티를 받는 이른바 ‘프랜차이즈’방식, iv) 외국교육기관이 학생모집을 주된 업무로 하는 국내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리하여 외국 대학(원)이 국내에 진출한다면 대학(원)의 신설뿐만 아니라 분교의 설치, 국내 대학과의 연합체제를 형성하거나 ‘교외 학위제도’(off-campus program) 등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얼마든지 있다.

교육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책적인 보호가 필요한 영역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WTO체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공행정과 국방 등 정부활동을 제외한 교역가능한 모든 서비스에 포함시키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7개의 서비스 시장의 개방원칙에 따라 1995년부터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 ① 내국민 대우 역제의 원칙 : 외국인과 내국민과의 차별대우 금지
- ② 최혜국 대우의 원칙 : 가장 유리한 대우의 수준을 동등하게 적용
- ③ 투명성의 원칙 : 국내에 적용되는 모든 규율과 법적 조치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
- ④ 국가독점의 제한원칙 : 독점을 부여할 필요성

에 대한 국가주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최소화되어야 함

- ⑤ 정부보조금의 제한원칙 : 정부보조금의 제한으로 외국참여 및 경쟁의 촉진
- ⑥ 인허가상의 무차별의 원칙 : 인허가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규제의 철폐
- ⑦ 점진적 자유화의 원칙 : 이상의 원칙들의 점진적 실현

이 원칙에 따르면 이제 교육서비스도 정책적 보호에서 벗어나 국경을 넘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외국 교육서비스와의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 항에 '점진적 자유화'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실제 개방의 속도는 매우 급속하여 1997년에는 대학(원)도 완전개방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2) 개방의 영향과 대응방향

교육시장의 개방은 국내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매우 큰 타격을 줄 것임이 틀림없다. 한국의 각급 교육기관은 그동안 외연적 성장에만 치중하여 내실을 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행정과 교육일선의 자율성 결여, 그리고 잦은 제도적 변경 등으로 교육서비스의 질은 선진국과의 경쟁을 감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외형적 성장의 결과, 교육시장의 규모가 매우 커졌고 여기에다 세계에 유례없는 정도로 높은 교육열은 한편으로는 외국인 공급자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상대적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에 수요가 몰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정적 영향은 시장의 잠식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는다. 흔히 지적되어 온 것처럼 국내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더욱 압박하여 교육의 외국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외국으로 물적·인적 자원의 유출을 가져옴과 동시에 외국문화의 침투 및 교육의 변질과 상업주의의 팽배 등으로까지 연결될 것

이다.

이러한 사정은 대학(원) 개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앞서 얘기한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외국 대학이 국내에 진출하여 개방의 정도가 30% 이내가 될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은 12조 원 가량이나 된다는 추계가 있다. 특히 국내 대학의 교육여건이 매우 취약한 것을 감안하면 시장잠식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된다. 교수 1인당 학생수는 33.3명으로 독일(8.6명)과 일본(9.7명)을 비롯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11.2명), 홍콩(13.0명) 등 우리의 경쟁상대 동남아국가들보다도 크게 열악한 지위에 있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더라도 이들 동남아국가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여건 아래 이루어지는 대학의 개방은 국내 대학이 경쟁에 밀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는 대학개방을 거부하거나 늦출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다. 이미 성립된 WTO체제에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의 눈으로 보더라도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의식적 문제로 말미암아 대학개방이 본격화될 1997년 이전까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개방을 앞두고 다소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대학 스스로가 개혁을 한다는 것은, 대학에 몸담아 온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고백이다. 교육행정가와 대학당국자는 입만 열면 “교육 백년대계”를 되뇌어 왔지만 실제로는 “발등의 불”에 우왕좌왕해 온 결과가 오늘날 한국 대학의 현주소이며, 이에 비추어 볼 때 대학개혁에서도 “발등의 불”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으리라는 ‘쓸쓸하지만 어쩔 수 없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학개방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위한 대학개혁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뿐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이것은 비단 대학 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육 전반에 해당된다.

사실 한국 대학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안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인구의 연령구조 상으로 볼 때 얼마 안 있어 이것이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도 무사안일하게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해 온 교육행정 내지는 대학경영 타성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타성의 타파계기를 대학개방이라는 외부적인 데서 구한다는 것은 수처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교육개혁이 "백년하청"이라는 현실을 우리는 견뎌내지 못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방을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 그대로를 개방에 맡겨두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물론 경쟁을 통해 어느 정도는 스스로 조정이 되겠지만, 의식적 개혁의 노력이 없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의식적인 노력은 그야말로 "백년대계"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대학교육 협의회는 이미 자율성의 신장, 교육 및 연구 여건의 개선, 이를 위한 재원확충 및 효율적인 경영 등을 그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지극히 온당하다.

이러한 방향으로 대학의 개혁을 의식적으로, 체계적으로 단행하는 것이 대학개방에 대한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될 것이며 이는 우리의 교육서비스 수준 전반을 한 단계 높이는 길이 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대학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을 둘러싼 우리의 사회환경과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도 대학개혁에 초점을 맞추면 그 구체적인 과제가 드러날 것이므로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 요구된

다. 사회환경과 의식의 개혁을 기다려 대학개혁에 착수할 여유도 없으려니와 일의 올바른 순서도 아니다.

5. 맺음말

시장의 무차별적 개방화를 통한 세계경제의 범지구화 추세는 그동안 UR과정을 거쳐 새로이 출범한 WTO체제하에 본격화·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기존 IMF-GATT체제의 동요 이래 혼미를 거듭하였던 세계경제질서를 시장논리의 강화와 그 적용의 공간적 확대로 보완·대체한 것으로서, UR의 협상과정은 보여주었듯이 G7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공동적 이해관계의 산물이다. '글로벌 자본주의'로 일컬어지는 이 새로운 세계경제체제가 그 내부에 불안정요인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강화되어갈 전망이다.

이 체제에서는 정부활동을 제외한 '그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세계경제질서의 주도권을 갖지 못한 개발도상국들로서는 사실상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로서는 이 조류를 바꾸어 놓을 힘이 없으며 적응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내부 개혁을 통하여 이 시련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임과 동시에 이성적이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에게도, 한국을 아무리 '신흥공업국'으로 달리 분류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교육시장의 개방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이고 보면, 이것을 해묵은 한국교육개혁의 계기로 삼아 적극적

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쟁력을 배양하고 우리 교육서비스 수준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비록 외부적으로 계기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살리지 못할 때 우리의 대학교육은 그 존재기반마저 위태로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대학개방의 부정적 영향을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흔히들 대학개방의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면서 교육투자재원의 절감, 이른바 ‘박사 실업자’ 및 사무직원의 고용기회 확대 등을 거론하기도 하나, 이는 주변적인 것에 불과하다. 경쟁에서의 낙오를 통한 상쇄효과도 고려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학을 비롯한 한국교육 전반의 사활 문제이다. 또한 교육개방이 우리 교육서비스의 대외진출을 보다 가능하게 한다는 이익이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핵심적인 것은

아니고 그나마 스스로의 내부개혁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는 그 효과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경쟁우위도 보장하지 못한다.

요컨대, 개방체제에서 살아남고 나아가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의식적이고도 체계적인 개혁만이 불가피하면서도 바람직한 대응방향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것이 긴급하면서도 가능하다는 데에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

김대환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영국 옥스퍼드대학 초빙교수,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자본주의의 이해』, 『영국의 민영화기업에 대한 규제』 등이 있고, “민영화 논리의 비판적 고찰 : 시장규제 및 소유권과 관련하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